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1994. 7

許 文 寧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鄭 圭 燮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全 賢 俊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次

I. 問題提起	1
II. 金正日の權力基盤	2
1. 理念的基盤	2
2. 制度的基盤	3
3. 人的基盤	4
III. 金正日の情勢認識	5
1. 社會主義의 優越性 堅持	5
2. 對外開放에 대한 必要性 認定	6
3. 南北間의 體制競爭 持續	7
IV. 金正日 政權의 當面課題	8
1. 體制鞏固化 및 經濟難 解決	8
2. 核問題 解決	9
3. 南北頂上會談 開催	10
V. 金正日 政權의 政策 展望	12
1. 基本 方向	12
2. 金正日 唯一體制 構築	13
3. 새로운 經濟發展戰略 摸索	14
4. 核問題의 「일괄타결」 推進	15
5. 南北頂上會談 再推進	15
VI. 政策的 考慮事項	17

I. 問題 提起

-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94.7.8 金日成의 사망으로 종식되고, 김정일 정권의 出帆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임.
-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 심화, 핵문제 등으로 總體的 危機 狀況에 있었던 바, 김일성은 사망 직전 제3 단계 美·北韓 고위급회담의 개최와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입장을 취하였음.
- 김정일 정권은 출범과 함께 누적된 대내외적 과제를 해결하여야만 體制鞏固化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본 보고서는 김정일 정권의 권력기반을 검토하고, 김정일 정권의 當面課題는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에 북한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전망하려는 것임.

II. 金正日의 權力基盤

1. 理念的 基盤

- 김정일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權力承繼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체 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함으로써 김일성의 유일한 思想的 後繼者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왔음.
 - 74.2.19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 선언함.
 - 74.4.14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함.
 - 80.2 「지도자론」을 통해 권력승계의 당위성을 역설함.¹⁾
 - 82.3.21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하여 주체사상을 체계화하는 한편, 86.7.15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제시함.
 - 91.5.5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北韓式 社會主義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개념으로 정립함.

1) 「지도자론」은 혁명계승론과 후계자론(세대교체론·혈통계승론·역사적 준비 단계론·김일성 화신론)을 포함함.

2. 制度的 基盤

- 黨 중심의 一元的 政治構造에서 김정일은 黨 비서국과 組織指導部를 통해 黨權을 장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政務院과 軍을 장악하면서, 黨·政·軍의 공식적 직위를 단계적으로 맡아왔음.
 - 김정일은 74.2.12 당 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80.10 제6차 당대회에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국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제2인자의 위치를 확보했음.
 - 90년대에 들어서 단계적으로 軍部를 장악함(90.5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91.12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92.4 원수, 93.4 국방위원회 위원장).
-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를 통하여 반대세력 제거 및 후계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위부 및 사회안전부 등 정보조직 장악을 통한 住民統制 및 「1일 3선보고」 체제 확립을 통한 軍部統制(黨 軍事部·黨 組織指導部·軍 總政治局)를 철저히 유지해 왔음.
 - 73.2 발족된 3대혁명소조는 각급 생산단위, 행정기관, 문화기관, 학교 등에 파견돼 당정책 관철이라는 명분하에 김정일 체제 구축에 일익을 담당함.

3. 人的 基盤

-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원하에 항일 빨치산파와 한국전쟁을 치른 혁명 1세대의 지지를 확보해온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물리적 강제력의 3대 기구의 책임자인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원수), 백학림 사회안전부장 (국방위원, 차수), 이을설 호위총국장 (국방위원, 차수)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광 총참모장(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차수)과 전문섭 국가검열위원장(차수) 등 혁명 1세대의 지지도 확보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김정일은 주요 직책에 자신의 친·인척 및 동창들을 충원함으로써 「族閥主義」(nepotism)에 의한 人脈基盤을 형성하여 왔음.
 - 김정일은 70년대 중반 이래 「간부배합」 정책을 중시, 노년·중년·청년의 배합과 빨치산출신·유자녀출신·비유자녀출신의 배합을 추진하여 왔음. 그 결과 현재 당·정무원 부장급 이상 핵심인물의 90% 이상이 김정일 후계체제 아래서 발탁된 인물들임.
 - 한편 북한의 권력은 소수 권력엘리트에 의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상위서열의 엘리트들은 당·정·군·의회 등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음. 이들 대부분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체제에 절대적 충성을 바친 인물들임.²⁾

2) 요직에 있는 김정일의 친·인척들로는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김정일의 여동생)와 장성택(당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 김정일의 매제), 김영주 (국

Ⅲ. 金正日의 情勢認識

1. 社會主義의 優越性 堅持

- 김정일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 制度의 우월성을 견지하고 있음.
 - 김정일은 北韓式 社會主義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창조적 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함.³⁾
- 따라서 김정일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의 원인을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이라는 外的 要因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오인, 근본원칙 불견지 등의 內

가부주석: 김정일의 삼촌, 김용순 (당 대남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정숙의 동생), 김창주 (당 중앙위원겸 부총리: 김일성의 사촌 동생), 김정우 (대외무역부 부부장: 김일성의 고모 아들), 김달현 (전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 김일성의 외6촌 매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김일성의 고종사촌 남편), 황장엽 (당 비서: 김일성의 고모 사위) 등이 있음.

요직에 있는 김정일의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동창들로는 강성산(정무원 총리), 서윤석(평남도당책점 인민위원장), 전병호(당비서), 최태복(당비서), 연형묵(자강도당책점 인민위원장), 김환(부총리겸 화학공업부장), 윤기정(재정부장), 오극렬(당 작전부장), 김광진(인민무력부부부장) 등이 있음.

3)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5.5.

的 要因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多元主義」를 허용하지 않고, 사회주의 사상을 신념화·도덕화 하기 위한 思想改造事業의 필요성을 강조함.⁴⁾

- 사회주의와 「사상의 자유화, 정치의 다당제, 소유의 다양화」라는 다원주의는 양립할 수 없음.
- 사회의 모든 성원들 속에서 社會主義를 신념화·도덕화 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개조사업이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임.
- 김정일은 사상개조사업의 우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나, “빈 밥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교양해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經濟의 중요성 또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음.⁵⁾

2. 對外開放에 대한 必要性 認定

- 김정일은 자본주의 진영의 기본성격을 「帝國主義」로 규정함으로써 警戒的 態度를 보이고 있으나, 과학기술 교류 및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김정일은 82.3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

4)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3; “사회주의에 대한 해방을 허용할 수 없다,” 1993.3.1.

5)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1984.2.13.

협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김정일은 對外經濟交流·協力の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帝國主義의 경제적 침투를 배격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데에 자기 힘을 믿지않고 자본주의 나라의 발전된 기술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함.”⁶⁾
- 요컨대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사상·문화·기술의 3대혁명」을 통한 自立的 經濟發展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자본·기술도입을 포함한 開放政策, 즉 외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3. 南北間의 體制競爭 持續

- 김정일은 南北關係를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인 동시에 심각한 경제전」으로 규정하였음.⁷⁾
- 김정일은 統一問題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김일성이 제안한 「고려연방제」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으며,⁸⁾ 90년대에 통일을 이룩하자는 구호와 민족대 단결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자는 기존 노선을 답습하고 있음.

6)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1992.1.3.

7)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1984.2.

8) “꾸바신문 <그란마>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89.10.26.

IV. 金正日 政權의 當面課題

1. 體制鞏固化 및 經濟難 解決

-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대내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를 통한 思想統制 강화 및 經濟難 해결을 통한 주민불만 해소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증가, 부패의 만연, 비조직적인 반체제 활동 등 社會逸脫行爲가 증대되는 상황에 있었음.
 - 북한은 사상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94.3.31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4.4.7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 과업으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관철을 결정함.
 -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91.12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는 한편, 92년부터는 對外開放과 관련된 각종 法令을 제정함으로써 「통제된」 개방을 모색하여 왔음.
- 특히 북한은 食糧難·에너지난의 지속, 생필품부족의 만연,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외채 증가 및 무역의 악화상태 지속 등과 같은 총체적인 經濟危機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체제불안정 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체제공고화를 위하여 김정일 측근세력으로 權力構造를 재편하는 한편, 김정일에 대한 상징조작과 사상통제를 강화함으로써 內部結束을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난을 해결하여 주민생활 개선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2. 核問題 解決

- 북한은 94.6.13 IAEA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유엔 안보리가 對北制裁 결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核凍結이라는 유화책을 제시,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나(94.7.8), 김일성의 사망으로 회담은 연기되었음.
- 한편 주변 4국 및 한국은 북한이 核武器 開發 拋棄를 향한 가시적 조치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 美國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目標을 ①한반도 비핵화 보장에 의한 평화와 안정, ②강력한 國際的 核非擴散體制 유지에 두고 있으나,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방지 보다는 현 수준에서 凍結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中國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 유지, 대화·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 對北 制裁 반대 등임.
 -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구소련 공화국들의 핵관리뿐만 아니라, 자국의 安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북한

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뿐만 아니라 軍事的 轉用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플루토늄의 추출여부도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실천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향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봉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핵물질 전용 여부 등 核透 明性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서 南北相互査察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北韓 核問題는 제3단계 미·북한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國際的 制裁措置가 발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김정일 정권의 당면과제는 핵문제 해결의 가 시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음.

3. 南北頂上會談 開催

- 북한은 93.3.12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主 對美會 談, 從 南北對話」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기본합의서」 채택·발효에 따른 남북화해·협력기조를 와해시키는 對南政策을 구사하였음.
- 남북간에는 「특사교환」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93.10 3차 례, 94.3 5차례만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94.6.15~18간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을 통해 제3단계 美·北韓 高位級會談 개최를 도출하는 한편, 南北頂上會談을 제의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음.
 - 이에 따라 南北韓은 6.28 개최된 예비접촉을 통해 7.25~27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은 김일성 사망 직후 정상회담 개최 연기를 통보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김일성이 약속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현재 南北關係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므로 김정일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V. 金正日 政權의 政策 展望

1. 基本 方向

- 북한은 김일성 사후 혁명위업을 代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核心課題는 김일성이 개척한 偉業을 순결하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왔는 바,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基本方向은 김영남이 7.20 김일성 추도대회에서 발표한 추도사에 명백히 나타났음.
 -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노선을 견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한 統一 달성
 - 자주·평화·친선의 이념에 기초한 對外關係 발전

-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은 김일성이 견지해 온 政策基調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정책방향은 향후 김정일의 施政演說 등을 통하여 표명될 것이나, 북한이 대내외 상황에 비추어 漸進的 開放政策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일은 92.1.3 담화에서 多元主義를 철저히 배격하였는 바, 이를 수정하지 않고는 김정일 정권이 체제의 본질적인 改革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북한 당국은 우선적으로 이미 모색해 온 통제된 개방 정책을 보다 적극 추진함으로써 당면한 經濟難을 해소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 김정일 정권의 國內的 支持基盤을 공고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2. 金正日 唯一體制 構築

- 북한체제는 金日成 唯一體制的 특성을 지녀왔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계승자」이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필연적으로 金正日 唯一體制的 성격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에 따라 김정일은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에 절차에 따라 공식 취임할 것이며, 나아가 「수령」으로 추대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일 정권은 유일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김정일주의」화를 시도하고, 김정일에 대한 象徵操作을 대대적으로 전개,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 하는 한편, 김정일 측근의 충성과 및 친·인척을 중심으로 權力構造를 재편해 나갈 것임.
 - 김정일은 부족한 카리스마를 경제난 극복이라는 업적으로 보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정일 세대 가운데 김용순·김달현 등 技術 官僚의 중용이 예상됨.
- 북한은 김정일 유일체제의 國際的 保障을 위해 대외적으로 中國과

의 관계강화 및 원조획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정립 및 對美·日 관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임.

- 특히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열쇠뿐만 아니라, 세계질서 재편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對美關係 개선에 주력할 것임.

3. 새로운 經濟發展戰略 摸索

- 대내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體制維持를 위해 民生問題라는 불가결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과거 重工業 우선주의에서 전환, 農業 및 輕工業 發展을 통해 주민불만 해소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러한 경제발전전략은 이미 수립된 3대제일주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나타날 것임.

- 이와 함께 북한은 무역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對外開放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대외개방정책은 전면적인 개방정책이 아니라 대외개방의 波及效果를 극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地域만을 개방하고, 북한 근로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임.

4. 核問題의 「일괄타결」 推進

- 북한은 기본적으로 體制維持와 經濟回生을 위하여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核武器 개발의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재개될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 「일괄타결」 접근방식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美國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은 우선 NPT 완전복귀, 신고핵시설 사찰 수용의 반대급부로 미국에게 대북한 적성국 교역법 규제조항 해제, 외교관계 정상화 보장, 對北 핵안전보장 및 경수로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할 것임.
- 북한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핵계획 「영구동결」 약속의 대가로 미국에게 國交正常化, 平和協定 체결, 경수로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약체결 등을 요구할 것임.

5. 南北頂上會談 再推進

- 김정일 정권의 최대 정책목표는 「체제 공고화」에 있으므로 서방의 자본·기술 획득, 對美·日 수교 및 김정일의 정권 공고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南北頂上會談을 재추진하여 외형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명실상부한 북한의 새로운 「수

령」의 지위를 획득, 체제공고화를 도모하려 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내부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94.7.14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의 조문단 파견을 환영한다는 담화 발표 이후 對南非難攻勢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 정권은 統一3原則과 「10대강령」을 對南·統一政策의 기조로 천명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북한이 南北共存을 모색하더라도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나타내는 것임.

- 북한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는 북한사회의 開放을 초래하여 체제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실천과 같은 남북관계 全般의 개선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미·일 등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도 南北經協에는 신축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북한은 統一方案과 관련, 지역정부의 권한 확대 등 연방제를 부분적으로 수정·제시하여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임.

VI. 政策的 考慮事項

- 북한은 政權交替期에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민감한 만큼 한국은 김정일 정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경제적 외교역량의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整地作業을 하는데 對北政策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새로운 對北·統一政策을 모색·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一貫性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새로운 집권세력에 대해 「南北對決」이 아니라, 「南北共存」을 통해서만 북한체제의 존속이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한민족 전체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줌.
- 남북정상회담 관련, 우리측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父子世襲體制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平和共存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대화 재개시 북한의 입장이 명백히 표출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相互主義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총체적 난국에 비추어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變動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事前에 수립하여야 할 것임.

빈 면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和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統一情勢分析 94-1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7월 일
發行日 1994년 7월 일
